

근대를 향해, 국민국가를 향해, 민주주의를 향해: 송진우의 길, 중용적 진보의 길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고하 송진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추모와 평가의 언설들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필자는 먼저 역사발전에서 갖는 선견(先見), 선각(先覺), 선두, 선구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무겁게 새기고자 한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해 적용할 때 이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들 선구자들의 앞선 깨달음과 실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만들어지고, 후대의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때론 생명을 바치기도 한다. 우리는 오늘 역사 속의 한 사람 고하 송진우를 선각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고하를 이해하는 공적 키워드는 곧 근대와 국가건설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생애 동안 이를 묶어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핵심가치는 곧 진보였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당대의 현실 속에서 중도적 중용적으로 진보를 실현하려 한 중용적 진보를 추구하였다. 여기에서 그의 선견성은 진보성은 물론 중용성과 만난다.

한국의 근대 국가건설과 발전의 역사를 제 1단계, 1876년 - 1953년 사이의 국가형성 시기, 제2단계, 1953년 - 1987년의 산업화 시기, 셋째 1987년 - 현재까지의 민주화 시기, 넷째 현재 이후의 복지화·인간화의 시기로 나눌 때 고하는 일찍이 이 과제들을 모두 꿰뚫고 멀리 내다본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전체를 통찰하되, 그는 자기 시대의 임무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직시하고 실천해간 인물이었다. 전체에의 통찰과 당대적 실천을 결합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고하는 주지하듯 일제 유학시절부터 제일 유학생의 지도자였다. 청년의 시기 이래 그는 국민심성 개조를 중시하여 유교를 반대하고 공적 심성의 발양이 중요함을 깨우쳐왔다. 나아가 국민의 단결, 문화, 봉공, 곧 공적 헌신을 주창하였다. 이는 오늘날에도 다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성을 일찍부터 표설한 것이었다. 고하는 일제하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주 평가 받아왔다. 교육과 언론에 종사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새로이 진주한 미군 역시 여러 문건에서 그를 민족주의 진영을 대표할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을 만큼 식민통치 시기 고하의 걸음은 압도적인 것이었다.

그가 주도하거나 참여했었던 초기 문화운동들은 넓은 의미의 근대를 향한 국민교

육과 국민계몽운동이었다. 이를테면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건립운동, 문맹퇴치운동, 브나로도 운동, 단군-세종대왕-이충무공의 삼성사 건립추진 등은 민족문화 창출과 근대국민 형성을 위한 운동들이었다. 후대 교육과 계몽의 중요한 기반과 토대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고하는 식민시기 동안의 좌파 배제, 해방 직후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및 조선인민공화국(인공) 불참에서 볼 수 있듯 공산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대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경영과 논조를 주도하였던 동아일보에 다수의 사회주의자들도 기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념적 포용의 폭을 보여주었다. 고하는 쑨원(孫文)을 가장 존경하였는 바 그는 중국 근대 민족주의의 원형이자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서 고하가 쑨원의 한국적 길을 상념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론해본다.

그는 48인 민족대표로서 3·1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그는 친일로 변절하지 않고 일관된 민족주의자의 길을 고수하였다. 필자는 종종 3·1운동 민족대표는 33인이 아니라 48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상념하곤 해봤다. 조심스런 평가이지만, 33인은 단지 공적 대표성 이외에는 없지 않았나 싶다. 48인으로 확대되는 것이 더 나은 것도 그 때문이다. 33인 대표 중에서도 적지않은 인사들이 변절하였으나 고하는 그들을 뛰어넘는 민족주의자의 길을 걸어갔다. 많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전향할 때 고하의 지조와 일관성은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고하는 한국에서 자유주의 수용과 발전의 한 중심채널이었다.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돌아보건대 이 점은 두드러지게, 그리고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영미와 일본 유학을 통해 고하 - 인촌 김성수 - 설산 장덕수 - 해공 신익희 - 유석 조병옥, 그리고 윤보선과 장면 - 민주당 -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초기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포괄하면서 초기 반독재투쟁과 4월혁명의 중심 지주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아일보를 포함해 부분적으로는 박정희 시기의 반독재 담론 역시 이들 그룹이 주도하였다. 이 초기 자유주의 그룹은 70-80세대, 또는 86세대(60년대 출생의 80년대 학번들)의 등장 이전시기에는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 담론과 운동의 한 분명한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사회는 연속성과 지양의 관점에서 심층연구를 수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해방 직후 고하는 정부수립 모색 단계에서 건준 및 인공 반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봉대, 그리고 국민대회 준비회를 추구하였는 바, 그 핵심 이유는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 때문이었다. 첫째는 공산당 주도 반대였고, 둘째는 일본 후원 - 총독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고하는 총독부의 제안을 수용하여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민족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고하의 고결성과 탁견이 돋보이는 점이였다. 셋째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민주적 절차와 민중적 참여의 결여 때문이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한 점이였다. 당시 일부 인사들이 두 번째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고 총독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의 견해로 보건대, 당시에

만약 모든 진보-보수주의들, 민족주의자들-사회주의자들이, 고하처럼 한 목소리로 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념을 넘어 통합적으로 하나의 건국준비조직을 건설하였다면 건국의 과정은 훨씬 더 단합되었고, 비분열적이었을는지 모른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민주주의자로서 고하에겐 세 번째 이유 역시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는바, 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곧 민중이 정부를 건설해야한다는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대신 이 때 고하의 길은 3면 종합이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정부 수립 시점까지 임정의 정통성과 과도성을 인정한다(여기에는 임정의 국내기반이 전무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둘째 “의회 차원에선” 국내적 기반을 거의 독점한 주류로서 국민대회를 통한 결성을 추구한다, 셋째, 연후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고하의 정교한 구상은 그의 사후에 남조선 입법의원이나 남조선 과도정부를 통해 거의 그대로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하는 당시 정당과 정치세력에 관한한 급진좌파와 극우반동을 제외한 좌우 공존과 경쟁을 모색하였다. 즉 의회제 내에서의 진보·사회주의와 보수·자유주의의 건강한 경쟁을 추구한 것으로서 좁은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훨씬 넘어서 영국의 진보자유주의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이미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과 관건은 임시정부의 강령 및 정책과 일치하며, 동시에 1948년 등장하는 건국헌법에 근사(近似)하는 것이었다. 이는 고하가 한국민주당 수석 총무 및 국민대회준비회 위원장이라는 민족세력의 중핵으로서 활동하면서 미군점령을 고려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적 민족국가’를 추구한 것이었다.

통일을 추구하며 다시 건국 시점을 반추해야하는 우리는 고하에 대해 두 가지 요체에서 전면적인 재해석·재음미·재평가를 시도해야한다고 판단된다. 이제 진보-보수 정부를 두 번 씩 경험한 현 시점에서 고하의 시야와 지향은 역사로서 머무르지 않고, 이념을 넘어, 통일을 향한 현실적인 미래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먼저 고하는 당시 한국민주당의 건설을 주도하였는 바 최근의 한 주목할만한 연구(윤덕영)에 따르면 창립 당시 한민당은 80%가 민족운동 관련자였고, 10%는 사회주의자였다. 친일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은 고작 14%로서 이는 당시 좌파조직 못지않게 적은 비율이었다. 즉 한민당을 친일파 정당으로 본 일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또 동아일보-보성전문 계열의 인사들은 42%였고, 나머지 상당수는 기독교계열이었다. 이들이 한민당의 양대 세력으로서 극우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었다. 초기 한민당은 일종의, 우파주도의 좌우연합정당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초기 한민당의 구성과 성격은 그것을 주도한 고하의 성향과 국량, 능력과 의도, 체제구상을 잘 보여준다. 즉 그는 탁월한 능력과 폭넓은 인맥을 갖고 해방 초기 국면을 주도하던 균형있는 중도주의자요 민주주의자요 민족주의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가 맥락적 재해석을 통해 더욱 깊이 음미해야할 점은 초기 한민당의 정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체 수립, 근로대중의 복리증진,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 토지제도 합리적 재편’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당시 한민당의 정강정책은 사실상 사회민주주의 정강정책으로서 이는 역시 임정 헌법 및 건국강령, 대한민국 건국헌법과 거의 동일하였다. 즉 근대 이후 주류 체제구상의 본령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몰락한 현실에서 의회주의를 통해 평등과 복지체제를 추구한 고하의 선견은 오늘에 충분히 되살릴 가치로 살아있는 것이다.

고하는 1945년 12월 22일 방송된 [한국민주당의 정견]을 통해 “비록 독립한 국가가 되었더라도 그 권력이 일인의 전단한 바 되고, 일계급의 독재한 바 된다면 무엇으로서 우리의 생명재산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민중에 의하여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치가 실현됨을 따라서 민중의 자유가 확인되고 민중의 평등은 보장될 것.” “과거에는 자유에만 치중하고 균등에 있어서는 진실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윤추구에 광분한 나머지 경제적 균등의 기회는 파괴되고 따라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그 안정을 잃었던 것”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데 있는 것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점의 자본을 제압하는데 있는 것”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일치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놀라운 언명이 아닐 수 없다.

개인독재와 계급독재를 넘어 자유와 평등을 두 날개로 삼아 민중과 근로대중을 위한 강력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고하에 이르면 이미 당시 첨예하던, 건국에 대한 좌우의 차이는 소멸되어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의 붕괴 및 신자유주의의 양극화와 독점체제가 심각해지는 오늘날 들어도 고하의 웅변과 관견은 놀라운 선진적 혜안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북구(北歐) 복지국가-사회적 시장경제-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을 반세기 전에 이미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한민당의 정책세목에는 실제로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 토지사유의 극도제한 및 농민본위의 경작균등권 확립, 광공업 육성을 위한 계획경제 수립, 주요 공장 및 광산·철도의 국영과 같은, 임정 헌법-건국헌법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세목은 사실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부분적으로 사회주의에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한민당을 극우정당으로 해석한 그동안의 해석들은 오류였던 것이다.

한민당은 1945년 12월 16일에 1946년 1월 10일 국민대회 개최를 결정하였고, 18일에는 지역 및 단체대표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1월 10일의 국민대회에 상정할 대한민국 헌법대강을 준비하기 위한 헌법연구위원 11명을 선임하였다. 모두 고하 생전의 일이었다. 당시 선임된 헌법연구위원들은 김병로, 김용무, 이인, 강병순, 송진우, 김준연, 장택상, 서상일, 정인보, 이극로, 백남운이었고, 후에 추가로 선임된 10명은 조병옥, 윤보선, 백남훈, 함상훈, 김약수, 원세훈, 고창일, 한근조, 안재홍, 김여식이었다. 이는 해방 이후 최초의 헌법제정 논의이자 최고 수준의 구성이었다. 이념의 폭 역시 극좌와 극우를 제외하고는 진보-보수 모두에 걸쳐 있었다. 이는 12월 20일 임정이 조직한 헌법기초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개시하였다.

정당창당(대의기구), 국민대회 개최(민중참여), 헌법 준비(법률제정)라는 치밀하고 정교한 고하의 삼면 국가건설 구상은 곧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당시 고하만이 이 셋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임정의 정통성과 과도성 및 미군정의 현실적 점령을 인정한 상황 위에서 38선 철폐와 양군철폐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서 신탁통치(탁치)문제의 등장과 좌우 과격파의 득세로 인한 이념적 양극화와 절대화의 흐름 속에 송진우의 치밀하고 원대하며 현실적인 중용진보적(中庸進步的) 건국구상은 좌절되고 말았다.

좌우극단주의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송진우 암살은, 개인적 좌절을 넘어 해방국면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비전, 특별히 중용적 진보의 실패를 의미했다. 이는, 현실 속에서 이상을 추구하여 둘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려했던, 해방 직후 가장 뛰어난 현실적 이상주의(practical idealist)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가 치른 대속적(代贖的) 벌금이었다. 고하는 생명을 벌금으로 내고 후대들에게 과업을 남겨주었다. 역사는 늘 뛰어난 선두주자들에게 벌금을 요구하고 그 벌금을 통해 후대들은 삶을 영위한다. 동시에 그 벌금들은 늘 후대들에 의해 다시 살아난다. 선두주자들의 벌금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력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당시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적 경로였던, 의회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결합을 추구했던 고하의 길은, 좁은 이념의 잣대나 자유민주주의의 틀에서만 접근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 동시에 통일을 향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추출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이제 고하를 보는 고루하고 협애하며 편벽된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산주의는 반대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수용하여, 민주적 의회적 방법으로 복지와 평등의 길을 갔던 그를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 그 길이 독립운동과 민족세력, 초기 한국민주당을 바르게 되살리는 길인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고갱이를 다시 살려내는 요체가 아닐 수 없다. 동시에 통일시대까지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이 자신을 던져 역사적 벌금을 먼저 지불한 고하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또 요구하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송진우를 바로 읽고 제대로 평가하는 지혜로부터 우리는 (과거의) 건국정신을 옳게 자리매김하고, (미래의) 통일정신을 바로 찾는 넓고 깊은 수원(水源)을 찾게 될 것이다. 갈라지고 다투고 증오하는 오늘의 우리 사회, 공동체, 조국, 민족의 현실을 돌아보매 넓고 길고 깊은 역사대화과 미래비전을 마련해주고 떠난 고하의 길 앞에 다시 숙연해지는 소연이다.

박명림 :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작성, 발표함.